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군대 내 성폭력, 군 조직 보위와 인권 사이에서

김엘리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외래교수

1.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

2021년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일하는 이 중사는 죽임에 이르렀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지 두 달이 지나고 2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 사건은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육군의 오 대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 역시도 성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혼자 생을 마감했다. 군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메모만이 남았다.¹⁾ 지금도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여군과 함께 일하기 싫었다’고 진술한 가해자 노소령의 군사법정 진술이다. 여군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폄하나 차별 구조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왜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

2014년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015년 기계화보병부대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들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잇달아 알려지면서, 국방부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군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모델도 개발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피해자를 지원할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 민간인을 채용하고, 해바라기나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 민간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상담과 법, 의료지원을 민간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통합지원체제도 만들었다. 그뿐인가? 2015년부터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성범죄자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2017년 5월, 해군에서 근무한 여군 대위

1) 故 오 대위는 “여군 여군 여군! 그 놈의 여군 비하 발언 듣기 싫고 거북했습니다. 저만 혼내면 되지 왜 전군의 여군을 싸잡아서 그러십니까. 영원히 저주할 겁니다. <중략>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중략> 임관부터 지금까지 제 임무를 가버이 대한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겼다.

도 싸늘하게 발견됐다. 소속 과장인 대령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따랐다. 올해 5월 발생한 공군 비행단 부사관 사건 이후에도 해군 부사관의 죽음 소식이 이어 알려졌다.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터라 그 충격은 더했다. 그리고 8월, 육군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청와대 청원에 게시되면서 가해와 피해의 논란이 일어났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성폭력 사건들까지 헤아려본다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도가 마련되고 통합시스템도 구축됐는데 왜 성폭력 피해는 지속되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은 여군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와 면담 결과는 한결같다. 여군들은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그 대응 체계를 신뢰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다.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크다. 특히 여군들은 성폭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답하고, ‘피해자의 비밀보장’, ‘고위직 지휘관의 인식개선’을 그 다음으로 내세운다.²⁾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도 그 효용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 현실을 나타낸다. 물론 군대 내 성폭력은 민간조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많은 부분 중첩된다. 군대이므로 성폭력이 더 빈번하거나 유별나지는 않다. 미투운동에서 실감하듯 기업이나 학교, 예술영화계 등 모든 조직

에서 성폭력은 만연하다. 군대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하나의 현실 세계이다. 단지 군 조직의 특성과 초남성 공간이 보유한 문화는 성폭력을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며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 글은 피해자 지원 통합체계가 있어도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를, 군이 인지하는 성폭력 개념과 군 조직의 지휘체계, 그리고 초남성 공간의 조직문화에서 살핀다. 이 글은 여군에 대한 성폭력에 중점을 두지만 남성 간의 성폭력 또한 간략히 덧붙인다. 남성 간의 성폭력은 군대 내 성폭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므로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2. 성폭력의 인지 : 군인의 인권과 군 조직 보위 사이에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내놓은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성폭력 피해자가 주로 중·하사라는 점이다.³⁾ 보통 하사 3년차에 장기복무 심사를 하는 근무 상황이 주 원인으로 주목받았다. 상관의 추천 배점을 주므로 부사관들은 상관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장기복무를 앞둔 위관급 장교도 비슷한 처지이다. 입대한 지 5년 이하의 초급간부들의 지위가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급간부들은 상관뿐 아니라 병

2) 국방부,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2019, p. 14.

3) 그동안 발표된 여군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는 6.3%에서 19%, 목격경험은 27.3%에서 41.3% 사이로 나타난다. 군복무 시작 후 1년 이전까지 성희롱 피해율은 전체 4.2%, 여성은 20.8%로 여성 간부 5명 중 1명꼴로 피해경험이 있다. (안상수 외, 2012, 이미정 외, 2017, 군대 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2017.12.21. 발표)

사들에게도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 외모 품평을 받거나 능력 비하하는 뒷담화를 경유하면서 ‘여성’ 군인이 된다. 성을 매개로 폭력의 상황에 놓이는 순간은 반드시 초급 간부들에게만 국한되진 않는다. 여군들은 젠더와 계급, 나이가 교차하는 어느 지점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한다. 군의 성폭력은 젠더화된 부정의이자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하지만 군이 정의하는 성폭력의 개념은 충분하게 이 점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비록 군은 2015년에 성군기사고라는 용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변경했으나, 성폭력을 인권 침해보다는 조직 보위에 둔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1조는 성폭력을, “성을 매개로 하여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로써 성범죄, 성희롱, 그 밖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성범죄는 “군형법 등 형벌 법규에 규정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칭한다. 그리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로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추행, 성매매 등”을 예로 든다.⁴⁾

용어는 성폭력으로 변경됐으나 내용은 성군기사고로 명명할 때 함유한 개념과 혼재돼 있다. 군인의 인권보다는 군 위상의 실추라는 조직성을 강조하거나 개인 윤리 혹은 성풍속이라는 도덕성으로 접근한다.⁵⁾ 그러니 군은 “별거 간부 중 성윤리 의식 저조

자” 등을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하여 지휘관 책임 하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내놓는다.⁶⁾ 2015년 이후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에서는 이 문구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으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성폭력을 개인 문제로 두거나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남아있다.

또한 군기는 군을 움직이는 기율인데⁷⁾ 때로 폭력을 발생하는 기조가 된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된 군의 특성은 군기와 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 모호함은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나, 노(No)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게 하는 위계질서를 보이지 않게 한다. 성폭력은 군인들의 안전을 해하고 국가안보를 적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군인의 인권이 곧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군 기강이 산다. 개인의 인권이 확립되지 않은 군 기강은 집단성 안에 폭력이나 부정의가 숨어들기 쉽다.

성폭력의 발생에서부터 신고와 보고, 조사 그리고 처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는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횡행한다. 이 상황에서 국방부와 군이 성폭력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정책의 내용과 시행 방향을 좌우한다. 군인의 인권이 빠진 군 조직 보위는 성폭력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적실하게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4)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제2468호, 2020. 10. 15. 개정)의 제6장 제241조.

5) 피해자 책임론을 연상시키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나(2018.7.10.), 피해자 유발론을 담은 성인지 교육자(군인)의 발언(KBS NEWS, ‘예방 교육한다더니... 당할 이유 있다?’, 2018. 2. 12.)

6)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군기사고 예방 종합대책’, 2013. 7. 5.

7) ‘군인복무규율’ 제4조 4항은 군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격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사관에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3. 군 조직의 지휘 체계

비밀 보장과 보고 체계의 충돌

군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는 군의 특정한 조직체계가 있다. 군대는 전통적으로 집단성을 강조하고 군 기강을 중시하므로 지휘관의 권한에 역점을 둔다. 부대에서 발생한 일을 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직 특성은 성폭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접수한 성고충상담관과 양성평등상담관은 지휘라인을 통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은 성폭력 담당과 상관없는 부대원들에게 성폭력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또한 피해자가 군대 밖 외부인에게 상담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출타할 때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성폭력 사건은 비밀 유지가 되지 못한다.

그동안 발표된 성폭력 실태조사들은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는 응답자의 38.2%가 신고하지 않거나 무응답을 취한다는 결과를 냈다. 군인권센터가 2014년 여군 100명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90%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피해 사실을 말한 후 일어나는 여러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44.7%) 나타내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고(47.4%) 생각한다. 여군들이 군의 성폭력 대응 체계를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다. 여군들은 “향후 군 생활에 대한 걱정,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고 비밀

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러니 성폭력 사건 자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 지원도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

성고충상담관제도는 이러한 고충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민간인을 성고충상담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지지 않은 채 상담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비밀유지와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전문상담관은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소속부대 참모장이나 양성평등 업무계선으로 보고한다.⁹⁾ 최소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성폭력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성고충상담관은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급 조직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로 갈등에 빠진다. 부대를 관리해야 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로서 상급자에게 사건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성폭력 사건에 관한 내용을 입수하려 한다. 그러니 성고충상담관은 군의 특성상 지휘계통을 무시하지 않는 인상을 주면서도 성폭력 사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곤란함에 처한다. 게다가 지휘관이 성고충상담관의 근무 평점의 50%를 부여하므로 성고충상담관은 독립적이고 소신있는 업무 수행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이미 안고 있다. 성폭력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한 처리 과정을 추진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는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 개선을 권유하는 일은 성고충상담관에게는 부담이다.¹⁰⁾

군 조직 보위의 원칙은 부대에 일이 발생했을 때

8) 국방부,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2019. 12., p. 17.

9)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7조 임무와 제101조 성폭력 발생 시 조치.

지휘관을 문책한다. 지휘관은 징계받거나 평점이 절하되거나 진급이 좌절되는 위기에 처한다. 성폭력 사건은 일종의 사고로 여겨지고, 성폭력 사건 발생 자체는 지휘관에 대한 능력 평가로 이어진다. 성폭력을 어떻게 적실하게 처리하느냐로 평가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 발생을 문제화하는 군 조직에서, 성폭력을 다루는 역량이 낮은 지휘관들은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부대 내에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은 은폐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지휘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성폭력 대응 방안들

군 조직 체계와 운영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제한적 신고제도이다. 제한적 신고제도는 피해자가 신고해도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담과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지 않고서도 군이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비밀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제한적 신고에서 비제한적 신고로 전환하면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제한적 신고제도는 피해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¹¹⁾ 2021년 6월 28일에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제한적 신고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모순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법률의 문항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부대관리훈령」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둘째는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의 폐지이다. 군 조직의 지휘라인은 사법체계에도 연계된다. 부대의 지휘관은 군 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 사무를 동시에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할권을 가진다. 사법절차에도 개입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지휘관은 판사가 원래 내린 판결을 확인하거나 감경하는 권한도 행사한다.¹²⁾ 더하여 심판관 제도도 있다. 군사법원은 군판사 2명과 일반 군인 중 임명된 심판관 1명으로 판사팀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군 장교가 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말하자면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은 셈이다.

지휘관이 사건의 판단과 처벌에 관여할 수 있는 군 구조의 특징은 그동안 사건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의혹을 주었다. 최기상 국회의원도 발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1심 군사법원의 성범죄 사건 실행률은 10%에 그쳤다. 이는 민간 형사법정의 실행률 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는 평가이다.¹³⁾ 조직의 특성상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특정 고위급 가해자들에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심도 주었던 정황적 자료들이다.

그런데 2021년 8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2년 7월 1일부터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이루어진다.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오랜 시간 시민운동과 반성폭력운동을 통해 축적된 인권의 관점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보다 더 적용될 수 있는

10) 성고충상담관 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정 외,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발전 연구』, 국방부, 2019. 12., pp. 49~84를 참조하라.

11) 제한적 신고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정 외, 『군대 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를 참조하라.

12) 군사법원법 제379조.

13) 강연주·조혜지,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집중분석①: “보보할 때까지 뽀뽀”. 군사법원은 왜 K중사를 풀어줬나, 『오마이뉴스』, 2021. 5. 6.; 군인권센터, 「문재인 정부 4주년 군인권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2021. 6., pp. 27~31.

조건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평시 군사법원이 존속하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허점은 남아있다.¹⁴⁾ 이를테면 공군 비행단의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성폭력 때문이라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사례라면, 이 사건은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군사범죄와 비군사적 범죄가 혼재된 사건의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군조직 체계와 관련하여 쟁점은 지휘라인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성폭력 피해 조사와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지휘계통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성폭력 대응 체계는 더 신뢰를 받으리라 기대이다.

그래서 셋째 방안은 성폭력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기구 설립이다. 그동안 연구자와 정책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의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와 독일의 옴브즈만 제도를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기구 설립을 제언했다. 국방부 담당자들은 2018년 미국 SAPRO를 방문하고 관련 시설을 견학하여 제도 개선과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¹⁵⁾ 성폭력 예방과 대응 전담기구 설립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에 업무 집중도를 높이며,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아직 국방부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기구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부가 2021년 9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수렴하고 시행할지 두고 볼 일이다.

4. 초남성 공간의 조직 문화

군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는 초남성 공간의 조직문화가 있다. 초남성 공간이란 단순히 남성의 비율이 우세하다는 뜻만은 아니다. 남성중심의 동일성과 획일성, 그리고 남성성의 원리를 군인되기의 규범으로 삼는 공간을 말한다. 초남성 공간의 조직문화와 성폭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째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이다. 군인은 타인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한다. 국가 안보를 수행하는 군사노동은 강한 힘의 담론으로 추진된다. 그런데 성폭력을 통해 군인인 자신이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취약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은 군인으로서 갖출 능력이 선형적으로 결핍되었음을 마치 입증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은 여군들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니 여군들은 성폭력 사건을 직면하고 문제화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폭력의 상황을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발하기보다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

둘째는 군의 위계질서 안에서 거절의 의사 표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보다 군 조직 보위가 우선되는 군 조직 문화에서 여군들은 성폭력 사건 때문에 군이 곤란함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크다. 이 가운데 성폭력의 경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사건은 흘러간다. 그리고 계급의 위계질서를 존중하면서 폭력적 행위를 거절해야 하는 군인의 자리는 단호한 거절의 목소리를 단번에

14) 시민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군사법원에서 취급하는 군사범죄는 약 13% 정도이고 그 외는 성범죄, 폭력, 교통법규와 같은 비군사범죄이므로 평시 군사법원이 필요한가에 관한 의구심은 컸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사법제도개선 분과(4분과)에서도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안으로 준비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4분과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을 존속하도록 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다. 군 기강과 조직 보위를 위한 지휘권이 약화될까 염려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보여준 셈이다.

15) 국방부 인사복지실, 『미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기구 출장 결과 보고서』, 2018. 11.

내기 쉽지 않다.

셋째, 군 조직 보위를 둘러싼 남성들의 연대이다. 공군 비행단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상설된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활용했다. 신고 후 상담과 법의 지원을 받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남성들 사이에 조직된 연결망은 시스템조차 오작동하게 했다.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남성들의 좌우기식을 강요했다. 또다른 성희롱도 있었다. 이는 비단 공군 비행단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남성들의 촘촘한 관계를 엮는 남성 중심 문화는 군 조직의 보위 아래 성폭력의 사안을 사소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이 연결망 안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고립된다.

여성들이 초남성 공간에서 고립되는 것은 여군만이 아니라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도 일어난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일을 크게 만든다거나 부대의 물을 흐린다거나 여군들을 부추킨다’는 등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은 원활한 성폭력 대응 활동을 늦춘다.¹⁶⁾ 또한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는 담당자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도 약하게 만든다. 헌병들은 자신들의 조사 체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병사들의 고충 문제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성폭력 사건이 충분히 인지되거나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이관하는 협조는 원활하지 않게 된다.

5. 덧붙이며 : 남성 간의 성행위/성폭력

군대 내 성폭력에서 여군에 대한 성폭력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유형은 남성 간의 성폭력이다. 남성 간 성폭력의 경우, 성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21.4%가 성폭력 가해 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고,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가해의 40%가 성적 폭력을 동반한다.¹⁷⁾ 최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85.1%는 상담 중 성고충 사례를 접한다고 한다.¹⁸⁾ 그래서 상담관들이나 조사자들은 고충 상담 시 예리한 감수성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다루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남성은 자신이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큰 수치심을 가져온다. 남성다움과 어긋날 뿐 아니라 남성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강한 남성성의 특성을 수용할수록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¹⁹⁾ 군대에서 남성 간 성폭력은 남성끼리 친근감을 표현하는 남성문화, 지루한 군 생활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장난으로 환원된다. 그래서 남성 간 성폭력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파악하는 행위에는 젠더/섹슈얼리티 감수성이 요청된다.

남성 간의 성폭력은 계급 질서 안에서 일어난다. 선임병이 가해하는 경우가 71.1%이고, 간부까지 더하면 81.2%이다.²⁰⁾ 그러나 남성 간의 성폭력 신고율은 낮다. 2019년 현재 12.1%만이 보고하거나 신고한다.²¹⁾ 동성애자들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16) 이미정 외,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발전 연구』, 국방부, 2019. 12., pp. 60~61.

17) 김엘리 외,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6. 12., pp. 15~17; 36~37.

18) 이미정 외, 『군대 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p. 29.

19)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실태조사』, 2004.

20) 이 비율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이다. 육해공군이 제공한 2013년~2015년 성범죄 자료를 필자가 통계 낸 결과는 90%였다.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남자는 여성스럽거나 심약하다고 보는 편견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면 이 역시 부대 이미지가 실추한다는 이유로 상급부대에 보고되는 정도가 미약해서 묻혀버리기도 한다.

일반형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군형법에만 명시된 특별한 성범죄는 추행죄이다. 추행죄는 대한민국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성범죄란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띠 때 성립되지만, 추행죄는 합의해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적용된다. 그런데 행위자의 관계와 대상, 장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과 성행위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남성 사이에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했다고 말하면 피해자도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추행죄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추행죄 조항은 군 기강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됐다. 군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닌,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는’ 곳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방부는 동성애자라는 정체성과 구별지으며 동성애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국방부는 정체성과 행위를 구분지으며 말하고 있으나, 추행죄 조항은 동성애와 남성 간 성폭력 모두를 규율하는²²⁾ 효과를 낸다.

결국 군기는 이성애 남성들의 위계질서를 토대로 하며, 군대 내 성폭력 담론은 이성애 규범을 경유한 젠더 질서가 구축한 전제들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군에 대한 성폭력과 남성 간의 성폭력, 그리고 군 추행죄가 구성하는 성담론에 관한 정교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군대 내 성폭력을 지속시키는 기제를 담론의 차원에서도 세밀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1) 국방부,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2019. 12., p. 47.

22) 추지현, 「‘강간’과 ‘계간’ 사이 :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 담론」, 『한국여성학』, 29(3), 2013.